



돼지고기의 수요개발

공급축소보다 수요를 개발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돼지사육이 심심찮게 화제에 오르고 있다. 너무 많아 파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아도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일견 반갑게 여길 수도 있으나 사육농들이 여기에 들어간 돈보다 더 싸게 팔아야한다는 비명때문에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사육중인 전국의 돼지마리수를 365만마리에서 320만마리정도로 줄이기로하고 수매제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신통치 않다.

최근 우리의 육류 소비는 급격하게 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가 남아 파동이 예상된다는 것은 어쩐 일인가. 우리는 작년엔 53만톤의 육류를 소비했다. 82년의 44만 3천톤보다 19.6%가 늘었다. 육류종별로는 돼지고기가 29만5천톤으로 전해보다 24.4%, 닭고기 12만톤으로 21.2%, 쇠고기 11만 5천톤으로 7.4%가 각각 증가했다.

여기서보듯 돼지고기소비는 작년중 많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남아도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수산부가 그때 그때 과잉예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돼지사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결국 사육농가와 기업양돈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가공식품업체에 진출하기 위한 전초로 많이 참여했다. 이들이 지난 79년 파동이후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돼지고기값이 안정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자 사태를 낙관한게 사실이다. 이때문에 관계당국은 발뺌할 수있는 여지는 있다. 예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육농에 대해 파동을 방지하기 위해 키우는 숫자를 줄이도록 중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비록 대량사육농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행정 지침이 가져올 앞으로의 영향에 관해서 우리에게 생각키는 것이 있다.

우선 돼지키우는것까지 행정이 관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며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면 왜 공급쪽을 줄이는 수단을 택해야하는지 궁금하다.

우리의 육류소비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년엔 한사람이 13.2kg을 먹는데 불과하다. 미국의 1인당 소비량 90kg까지는 그 소득수준에 비추어 너무 많다 하더라도 대만의 30kg 일본 25kg에 훨씬 못미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남아돈다고 걱정하는 돼지고기의 소비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예전대 쇠고기를 우리는 작년에 1억 3천 7백만달러어치나 수입했다. 82년에는 1억 1천 5백만달러어치 수입등 최근 몇년간 귀한 외화를 주고 사오는 쇠고기양이 늘어왔다. 이 쇠고기수입을 줄이고 그돈을 국내에 풀어 돼지고기를 사먹게 하는 방안은 없는가.

물론 쇠고기파동의 경험을 모르지 않는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한국민들의 쇠고기선호에 따른 입맛에 기인하는바 크며 돼지고기와의 가격차를 상대적으로 크게 한다든지, 돼지고기 가공업의 폭넓은 개발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 돼지사육비를 낮추고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을 줄여 돼지고기값을 싸게 한다면 지금정도 수준에서 남는게 오히려 이상할것이다. 산돼지값은 싼데 고기값이 비싸서는 남아돌수밖에 없다. 돼지고기에 관한한 공급축소보다 수요를 개발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동아일보 '84. 3. 9일자 사설전재)

